

● 제30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1. 6. 15.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

### I. 결의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홍성룡 의원 외 109명 공동발의
- 나. 제안일 : 2021. 6. 9.
- 다. 회부일 : 2021. 6. 9.
- 라. 의안번호 : 2519

#### 2. 제안이유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의 영토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해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음.
- 우리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정부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대사를 공개 조치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일본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음.
- 특히, IOC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스포츠와 정치적 사안을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한반도기에서 독도 표시 삭제를 권고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사례에 비춰 명백하게 편파적인

태도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 최근 국회가 규탄 결의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일본 정부의 그릇된 태도에 대한 규탄과 올림픽 보이콧을 포함한 일본정부와 IOC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에 대한 일본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을 촉구하고, IOC와 국제사회에 우리 영토주권 수호의지를 천명하고자 함.

### 3.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제올림픽위원회, 주대한민국일본대사

## II.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선희)

### 1 결의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결의안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영토주권 수호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2 결의안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2019년 7월 대한민국 외교부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사이트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삭제를 요구하였음.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공식사이트의 성화 봉송 경로 지도에 표시된 독도>1)

1) 연합뉴스, 2019. 8. 23

- 이후 대한체육회가 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에 수차례 홈페이지 수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6월 1일 외교부가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尚)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공개 초치하는 등 엄중한 외교적 대응에도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음<sup>2)</sup>.
- 일본의 이런 태도에 대해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지난 5월 2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쿄올림픽 조직위 독도 일본 땅 표기 강행 시 올림픽 불참 선언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시되었음.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뢰로 지난 6월 5~6일 전국 18세 이상 국민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7.6%가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찬성한다’<sup>3)</sup>는 의견을 보이는 등 국내 여론은 날로 악화되고 있음.
- 특히,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중재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IOC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SNS를 통해 “평창올림픽 당시 한반도기에 독도 삭제를 권고했던 IOC가 2021년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IOC에 대한 국제적 비판 여론을 모으는 캠페인 진행을 밝히기도 했음.
- 최근 국회가 일본정부를 비판하는 2건의 결의안을 접수한 것을 비롯해, 전라남도의회가 지난 6월 1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각 지방의회가 일본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2) 한국정부의 시정요구에 대해 홈페이지 디자인을 수정했으나 화면을 확대할 경우 여전히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3) ‘반대한다’ 는 응답은 21.9%(매우반대한다 11.8%, 대체로 반대한다 10.2%)로 조사됨.

- 본 결의안은 올림픽이라는 평화적이고 정치중립적인 스포츠 대회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토 침탈 의욕을 드러낸 일본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부적절한 태도를 비판하고, 우리 정부의 합당한 중재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일본을 편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IOC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의 국내 여론에 비추어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3 종합 의견

- 가장 평화롭고 정치 중립적이어야 하는 올림픽을 독도 침탈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일본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부적절한 태도를 비판하는 국내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가 정부 관계부처와 IOC 등에 이와 같은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결의안의 취지와 시기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반복적인 도발행위가 독도를 국제적으로 정치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에도 귀를 기울여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냉정한 대처도 요구됨.